

社說

복수·부전공 효율적 운영 필요

최근 언론, 특히 방송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방송학과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매년 대학입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학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신문방송학과를 수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수전공·부전공 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신문방송학을 또 하나의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1백여 명의 수강생 중 원래 신학과학생은 30여명에 불과하기도 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들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수강인원에 비해 강의실이 작아 바닥에서 강의를 듣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방송실습의 기회도 갖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강의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내용이 부실해지는 것도 염려되는 문제이다. 토론과 발표가 사라지고 일방통행식 강의만이 남게 된다면 과연 만족할 만한 강의가 될 수 있을까.

문제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특정학과에 인기가 집중된 것이 큰 이유겠지만, 강의체제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학교의 무책임도 크다. 복수전공·부전공의 문호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강신청이 전산화되면서 수강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수강인원에 맞는 강의실을 배정할 수 있었을텐데도 어찌된 일인지 수업과 교무과,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아직 수강생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전공에 따라 늘어난 학생들에 대한 예비책이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한마디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기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비좁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교수들은 마치 교양과목과도 같이 변해버린 강의에 정력을 쏟아야 했다. 복수전공·부전공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몸살을 앓는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뿐이다. 좋은 제도는 효율적인 운영에서 꽃피는 법이다.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방안을 기대해 본다.

합의로 정치제도 개선해야

지난 28일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에서는 서울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문민정부에 관한 시민의견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중 '5·6공 정권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항에서 51.8%가 불신한다, 42.7%가 예전과 같다고 답했다. 문민 정부에 대한 불신이 5·6공 때보다 더 심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정치계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독재에 준하는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남용 폐해를 의원내각제로 대폭 수술하겠다는 것이 그 표면적 이유이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야권은 정당의 전략적 방편으로, 그리고 여권 내부의 구조개편론은 김현철·한보 사태의 무마 내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불리한 특정 정치인들의 전략적 정치 술수가 압도하게 드러워져 있다. 한 나라의 정치 구조 재편이 이러한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 정치 현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제적 위기에 몰려 있다. 국가의 경제는 끝도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사회전반적인 부정·부패는 사회 양극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산재한 과제들을 뒤로한 채 위정자들은 권력잡기에만 눈이 멀어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보다 질 좋은 정치 체도를 선택할 주체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이든 이러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위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 하에서 보다 좋은 제도로의 개선을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정치 풍토에서 우리의 정치 현실이 한 걸음 더 진보해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시론

지나친 대통령 권력집중, 대안은 없는가

조선시대보다 강한 왕권

삼권분립 실현위한 권력구조개편 필요

민주적 의사결정절차 정착시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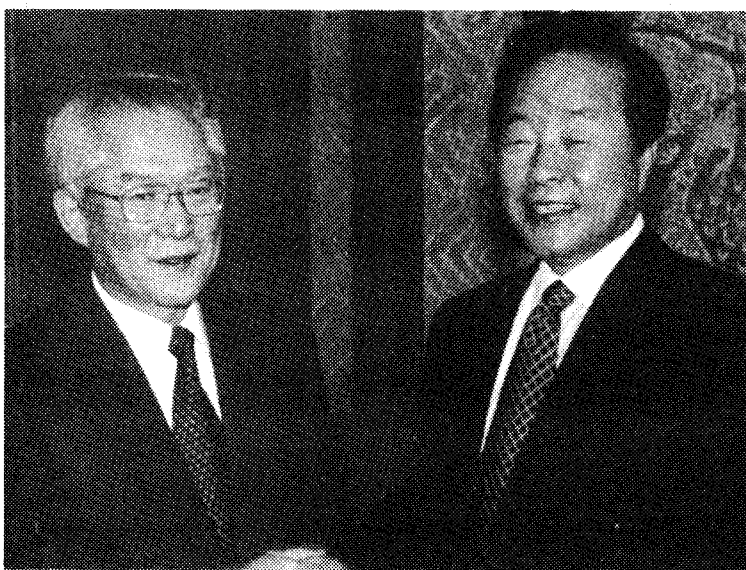
백승현

(정치외교학과 교수)

은 나라가 김현철체제로 총제적 위기속에서 슬렁이고 있다. 출범 이래 '문민정부'를 간판으로 내세워 각종 개혁과 사정을 의기양양 벌여 오던 김영삼 정권이 왜 4년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몸체'는 따로 두고, 엉뚱하게 '깃털'을 한보사건의 배후로 지목하여 수사중결하였다가, 의혹의 불씨가 다시 번지자, 권력의 하수에 안주하던 검찰이 전에 없이 세심 철저 재수사를 강조하며 허둥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시련을 초래케 한 총제적 책임자인 대통령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현 위기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우리식 대통령제의 문제점에서 그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공직, 재화, 기업이던 등 모든 이익과 가치의 처리에 대한 궁극적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1인의 독단적 폐쇄적 국가 전단(專斷)으로 인한 병폐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예에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막강하고 강력한 공식·비공식 권한들을 독점 장악하고 있는 변형적 대통령제이다.

삼권분립원칙에 철저한 미국 대통령제는 입법·행정·사법부간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는 정치구조와 절차 및 관행들을 잘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형식요건상 삼권분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견제와 균형이



▲최근 내각제 논의를 거부한 이회창 고문과 김영삼 대통령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은 삼부의 위에 존재한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독주하게 만드는 주요인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론적 수준의 권한들 외에 비공식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다. 그는 소속정당의 총수로서 집권당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그리하여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도 집권당 총수로서 지명함으로써 국회운영을 사실상 장악한다. 더욱이 국회의사(議事)를 주도하는 집권당의 의사결정 및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 지명에 있어서도 당내 여러 의견과 여론들이 민주적 절차로써 수렴되어 결정

되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적 지가 곧 당의 결정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구조에서 삼권분립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총수권과 다른 소리가 나오면 불법화음이나 해당행위나 하여, 다양한 의견표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당행태를 보면 우리의 정당은 두목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폭(組暴)적 사당집단과 다를 게 없다.

또한 대통령은 거의 모든 시중은행과 정부투자기관, 기업, 관련단체, 심지어 방송사 등 언론기관의 장

및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자기에게 충성한 인물들에게는 논공행상성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이나 기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권 및 언론활동 등까지 개입하고 있다. 검찰권의 행사나 사법부 고유영역인 재판과정에서까지도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과 입김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원치 않는 사건과 인물에게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또한 어떤 사건들에서는 재판결과가 회한하게도 대통령의 의중과 합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처럼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대통령이 장악하는 각종 권한과 권능들은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대통령제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의원후보의 공천과정에서 관여할 수조차 없고, 지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야 하는 미국 대통령에 비해, 모든 국가대소사들에 대해 자의사대로 힘과 작용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한국 대통령의 권력은 가히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이라 할만하다. 현 대통령은 삼정승의 의정부와 사관원, 사관 및 기타 군주가 지켜야 할 전통적 법도와 율령, 상소제도 등에 의해 강력히 견제되던 조선시대 왕권보다 더 막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민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해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낫다고 숙단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 현 대통령제는 승자전득(winner takes all)적 경향이 강해다다, 각종 비공식 권한들까지 대통령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인 권력 집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독재와 부패로 흐르기 쉬운데, 이 점을 바로잡는 것이 내각제 운운에 앞서야 할 일이다.

내각제 하에서 권력분산은 가능할지 모르나, 돈과 조직을 쥐고 있는 정치실력자들이나 돈줄의 연원인 재벌들의 입김에 의해 국가권위가 분열되고 의원직과 국가가 뒷거래되는 또다른 형태의 부패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내각제는 금권정치에 판치는 재벌공화국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수정과 난립으로 인한 정국불안정이 내각제 약점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권여당이 장수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오래 권좌에 앉아 있는 지도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내각제이다. 그러므로 내각제보다는 현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대통령이 장악하는 각종 권한들을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히 각 기관과 조직을 나름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여나가도록 허용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대통령제의 권력집중·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부터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적 관행을 정당과 의회, 내각 등에서 정착시켜나가는 선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응원할 분위기 형성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PC 포르노 '조선' 감정대립인가
정확한 사실파악과 이성적 대처자세 필요

얼마전 인터넷에 '조선'이란 이름의 만화가 등장했다.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의 어느 만화회사에서 제작한 '조선'이란 만화의 광고가 실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화가 포르노라는 데 있다.

지난 12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최재홍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발머리의 한국여성에게 '조선'이란 이름을 붙이고 성애장면을 묘사한 것은 민족의 자존을 깎아내는 처사이며, 이런 CD들이 전세제로 팔려나가면 마치 한국이 '포르노의 나라'로 오인될 수도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인터넷 사이트(<http://www.waku.com/>)에서 '조선'의 광고는 사라진 상태이다.

그런데 하이텔 일본 통신원에 의하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실제사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다. 우선 '조선'이라고 알려진 여자 캐릭터의 실제 이름은 'CHOSEN AME'이며 원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란한 성생활을 묘사한 만화는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그 만화가 실린 동인지는 아마추어동인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천리안 이용자들은 작가의 의도가 불분명한데도 이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것은 그간 꾸준히 지속되어온 일본의 망언과 감정대립이 원인이라고도 한다.(ID: Y3570) 또한,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해 망언을 해도 사죄만 하면 사건이 해결됐듯이 일본의 망언에 대해 평소 우리나라의 무책임한 대응책이 부른 문제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ID: LBHCOM)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일본을 무대로 한 에로영화나 간접적으로 일본을 비난한 만화도 많이 있는 실정이므로, 진정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선안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ID: IRQ72)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통신원들은 이번 사건에 크게 분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최용섭 기자)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기차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21세기 한국을 대표할 국민차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1997년 9월, 현대자동차가 탄생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경승용차-여러분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다목적, 다기능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RV형 경승용차입니다. 경차의 모든 혜택은 물론이고, 더욱 강하고 세련된 디자인, 스타일입니다. 경차 이상의 안전으로 무장하고, 경차를 능가하는 쾌적공간을 제공합니다.

신개념 경승용차를 드립니다

●응모일정

응모기간	1997년 3월 21일 ~ 4월 30일	미감일한 접수분만 인정
당선발표	1997년 6월 2일(월)예정	주요일간지
시상식	1997년 6월 5일(목)예정	변동시는 통보예정

●응모방법: 응모양식에 의거 우편엽서, 영업소 방문, PC통신, 인터넷 접수

●응모양식

차명	
의미	
이름	성명
전화번호	직업
주소	연령
	보유차종

※ 외래문의 경우 양자택일 원칙으로 한국 모두 기재하십시오.

●보내실곳

우편: 110-605 서울 서초구 관악문화체육사서함 533호 "국민차 차명 공모 담당자" 앞

영업소: 방문접수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GO HDMOTOR 인터넷: www.hmc.co.kr

●선정방법: 차명과 의미를 종합 평가하여 당선작 선정 (차명의 의미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내의 차명이나 자동차 상표로 출원, 등록한 상표명 또는 유사한 이름 제외 (동일한 차명이 많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구분	인원	경품내역	비고
대상	1명	현대자동차 경승용차 1대	선차발표후 1주일내 전달
최우수상	2명	고급 PC 1대(현대전자 멀티탭)	
우수상	30명	세티폰 1대(가압비 제외)	
장려상	1,000명	기념품	

※ 재발된 응모자의 재발된 현대자동차에 대한 자격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 상용도로에 대한 차량의 사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문의: (02)746-5738 "국민차 차명 공모 담당자"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GO HDMOTOR 인터넷: www.hmc.co.kr 전화: 110-605 "국민차 차명 공모 담당자" 앞